

대화록 증발... 여야 '폐기' 공방

새누리 "기록물 없거나 참여정부서 폐기"

민주 "못찾는 것...MB 정부 없었을 수도"

운영위, 22일 최종 결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됐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정국이 술렁이고 있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회'는 지난 15일에 이어 17일에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예비열람을 했지만 핵심 자료인 대화록은 찾지 못했다.

열람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해 "국가기록원이 대화록과 녹음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 달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국가기록원 측이 "확인한다"는 답변을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이 옳은 대답"이라고 질책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물 이관에 실무적으로 참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제 왜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대해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화록 원본의 국가기록원 존재 여부와 없을 경우의 책임론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나아가 대화록이 실제로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새누리당은 참여 정부에서 폐기했을 가능성을 내비친 반면, 민주당은 "기록물 폐기를 지시했고 그때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 안 된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화록 사본조차 파기하지 않고 국정원에 남긴 노 전 대통령이 이 원본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화록 부재가 확인된다면 국민적 의혹의 눈초리가 국가기록원을 관리해온 이명박 정부로 쏠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부터 국가기록원 자료를 다시 검색한 뒤 22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최경환 운영위원장은 "(총 10명인) 열람위원 전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최종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주말을 포함해 22일 이전에는 교섭단체별 열람위원 2인·전문가 2인씩 총 8명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검색활동을 진행한다"면서 "또 대통령기록관도 관련 회의록을 검색하는 자체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철수 의원이 18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안철수와 함께하는 도민토론회-한국사회구조개혁과 호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여야, 국정원 개혁 집중해야"

전주서 '호남발전 세미나'...신당보다 인재영입 우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8일 "여야는 국정조사의 본질로 돌아가 조속히 국가정보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한 기자간담회와 세미나를 통해 "NLL(북방한계선) 발언 진위 공방이나 대화록 원본 실종 가능성 등에 매몰돼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분의 1을 정쟁으로 소모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소모적 대립으로 국정조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무슨 명분으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실종' 논란에 대해선 "대화록 원본이 분실됐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만약 찾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선 분명히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 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안 의원

은 "좋은 분들과 먼저 만나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공유되면 그 분들과 함께 같이 그릇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해 인재영입을 우선으로 한 뒤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한국사회 구조개혁과 호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전북 지역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강동원 무소속 의원과 송해진 전주시장, 서삼석 전 무안군수 등을 포함해 지지자 10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화록 실종 미스터리...시나리오별 파장은

못 찾는다면... '영구미제' 가능성 배제 못해

애초 없었다면... 파기 여부 책임 공방 불가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실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17일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NLL·북방한계선·남북정상회담 등 7개 검색어로 검색을 실시했는데도 원문을 찾아내지 못했다.

기술적 이유로 원본을 못 찾는 것인지, 애초 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자체가 보관되지 않았던 것인지,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대화록이 '증발'된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설이 난무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이 '영구미제'로 남거나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원본을 못찾는 것이라면... '영구미제' 가능성=정부의 복잡한 국가기록물 관리체계 때문에 원본이 있는

데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할 때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圓)'의 자료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통째로 넘겼으나, 국가기록원의 문서시스템은 이지원과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형식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파일 형태가 달라지면서 관련 자료가 유실되거나 검색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이 무게를 두는 시나리오지만 새누리당에서도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류작업을 소홀히 했거나 보안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존재 여부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영구미제' 사건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술적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인만큼 여야간 책임 공방도 덜하고, 정치적 파장

도 작은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다.

◇애초 원본이 없었다면... 파기 공방 비화=국가기록원에 대화록 원본 자체가 없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된다. 회의록이 언제, 왜, 어디로 사라졌는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붙을게 분명하다.

이 경우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으나 대화록이 이명박 정부에서 파기됐을 가능성을 큰 갈래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자가 무게를 두고 '참여정부 폐기 의혹'을, 민주당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 간사회의에서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감정인을 적는 명단을 교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국조 특위 일정

24일 법무부 보고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의 기관 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특위는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 순으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이어, 다음달 15일까지 현장방문,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특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장관, 국정원장, 경찰청장을 국정조사 관련 보고를 위한 기관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 기관에 총 238건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오는 24일 법무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 등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여야가 국가정보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 증인채택, 국조 범위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날 간사회의에서 청문회에 부를 증인·참고인·감정인을 적는 명단을 교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배기운 의원 "국민참여재판 안받겠다"

내달 22일 항소심 선고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나주·화순)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항소심은 예정대로 진행돼 다음달 22일 재판부가 2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날 무소속 박주선(동구) 의원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지역정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배 의원은 18일 오후 광주교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심사숙고 끝에 참여재판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

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심 재판 절차에 대한 의도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공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배 의원과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해 선고한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배 의원에게 안내서 등을 보냈을 뿐 1주일 이상의 참여재판 회담 여부 판단 기간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 의원이 참여재판을 희망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했다. 배 의원의 한 측근은 이와 관련 "절차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최선을 다한 만큼 재판부를 믿고 담당하게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70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함께 기소된 회계 책임자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회계 책임자의 경우 선거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자의 당선에 무효가 된다. /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시네마 분양완료

201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지상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